

대화

VI

통일정책의 지지기반 확충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제3절 통일교육의 내실화

제4절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강화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개방 확대

제6절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업무 혁신

냉전의 산물인 남북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통합과 통일 미래를 향한 실천적 로드맵으로서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곧 대북정책이다.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VI

통일정책의 지지기반 확충

냉전의 산물인 남북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통합과 통일 미래를 향한 실천적 로드맵으로서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곧 대북정책이다.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삼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대북정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책수립,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 왔다. 이 장에서는 정부가 200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국민참여 확대방안을 비롯하여 홍

보·통일교육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 등 국내외 정책 지지기반 확충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1. 정책과정상 폭 넓은 의견수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열린 통일포럼」과 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고객과의 대화」는 장관과 실국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대화채널이다.

2005년에는 장관 및 관계 실국장 등이 남북 경제·사회문화 교류 분야 관계자, 개성공단개발사업 관계자, 통일교육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총 200여회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정책 수요 고객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산출하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고객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방북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비율 조정’ 등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통일고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고문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정책자문과 직능별 여론수렴활동 등을 통해 통일 정책 수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6·15 5주년 민족대축전에 대한 평가, 북한 핵문제 대응전략, 남북간 교류협력,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건의하였다.

아울러 주요 대북·통일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 통일교육, 남북회담의 6개 분과위 총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총 22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 및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정책과정에 반영하고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에는 3회의 정기 여론조사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 사이버 여론조사도 실시하였다. 2005년 2월 금강산 체험연수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연수 참가 전에 비해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북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밖에도 대통령 특사 방북,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성과 등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파악,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 국민참여의 활성화 정부는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통일고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일리지 제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홈페이지상의 ‘국민참여 마당’에 개설된 ‘전자공청회’, ‘통일정책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온라인 활동 및 ‘통일교육’,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2005년 8월 마일리지 시스템 개시 후 총 34,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홈페이지의 ‘자유토론방’, ‘정책제안’ 코너 등에 네티즌의 참여가 증대하고, 홈페이지 방문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에는 우수 회원에게 대북 지원 쌀 인도 및 분배현장 민간인 대표 등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반국민에게 정책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통일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100여명의 통일서포터즈들이 대북 쌀·비료지원, 이산가족 상봉행사, 통일문화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여 행사 진행을 돕는 등 통일 업무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민간 전문가 및 NGO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공동체 운영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정부간 협의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는 대북지원 방향과 사업계획, 민관 협조 및 역할분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대표적 정책공동체이다. 2005년에는 5개 민관 대북합동 사업 및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대북지원 정책에서 민관 협력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포럼,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개성공단사업협의회,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등 정책공동체에 민간 전문가가 정책자문 및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50여회 운영되었다.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는 정책분야에서 민관이 협력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통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3. 고객중심의 정책평가

통일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 평가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평가회의는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기 평가회의 4회,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 등을 통해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부는 2004년부터 남북경협 종사 기업인, 학자, 이산가족,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 대북정책의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주요 대북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통일정책 모니터링」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고객의 목소리를 반영,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업무개선 및 사업부서 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당초 100명으로 시작했던 모니터링단의 규모를 분야별 대북정책 및 사업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고객집단 709명과 일반국민 333명 등 총 1,042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하였으며, 총 4차례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한반도평화증진을 위한 노력 및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 개성공단 시범단지 본격가동 등 21개 연두업무 보고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새로운 CI 제작, 남북출입사무소의 편의성, 집합식 통일교육의 효과 등 부서별 단위사업에 관한 평가를 각각 2회 실시하였다.

4. 민간 통일단체 활동 지원

1990년대 이후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는 23개의 신규단체가 추가되어 12월 말 현재 통일부 허가 비영리법인은 총 163개이다. 활동 영역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

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교육 등 전문화·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고 민간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2005년에도 전년에 이어 많은 민간단체들이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6·15 통일대축전', '8·15 민족대축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남북 공동행사들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만들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일조하였다.

정부는 또한 상장, 표창, 후원명칭 사용 등 각종 통일관련 대중행사를 지원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였다. '남북청소년교류 편지쓰기 전국대회', '통일소원음악회', '통일문예제전'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일반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남북공동 사회문화교류 행사로 추진된 '남북평화통일미술축전', '남북공동기획 고구려 문화전' 등은 국민들이 순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남북화해의 장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단체들의 통일정책 토론회, 지역순회 통일포럼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정책제언을 적극 수렴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

한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교육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북한과 상설적인 대화창구를 갖고 여러 가지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였다.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및 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사회적응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일교육협의회는 회원단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였다.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통일홍보의 대상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고려하여 고객들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홍보내용을 발굴하고, 아울러 홍보방법과 매체의 다각화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온라인게임인 카트라이더를 활용하였으며, 영문 뉴스레터를 꾸준히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의 다양화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통일부는 국민의 높은 정보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고객서비스(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가. 통일부 홈페이지 | 통일부의 대표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는 1996년 12월 개통한 이래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통해 정책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탈사이트로 자리 잡아 왔다. 또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긍정적인 해외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도 강화해 왔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분야별 홈페이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일부 운영 홈페이지 현황

사이트명	주소	주요내용
통일부	unikorea.go.kr	통일소식, 전자민원창구, 참여마당, 북한이해, 자료실, 통일부안내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소장자료검색, 북한영화소개, 북한실상설명회 안내, 자료실
남북회담자료	dialogue.unikorea.go.kr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사료 데이터베이스, 자료실, 정보검색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 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남북교류협력시스템	inter-korea.unikorea.go.kr	북한 및 남한방문, 북한주민접촉, 협력사업, 교역물품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사이버통일교육센터	uniedu.go.kr	온라인 통일강좌, 통일교실, 북한청소년백과, 자료실, 참여마당

Cyber 통일교육센터

홈 > 커뮤니티 > 메일링서비스 > **웹진(Unizine)**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통일교육원 | 온라인통일강좌 | 청소년통일배움터 | 자료실 | 참여마당 | [사이트내 바로가기](#)

몰아보세요 | 자유게시판 | 정보자료교환 | 건의사항 | 커뮤니티 | 메일링서비스 | 단체행사홍보

청소년 통일배움터

▶ 통일교실

- 초등학교 교실
- 중학교 교실
- 고등학교 교실

▶ 한마음학교

▶ 통일Q&A

▶ 북한청소년백과

▶ 가상북한체험

▶ 통일만화

▶ 통일게임

▶ 도전통일벨

▶ 통일교육자료

▶ 속제도우미

홈 > 청소년통일배움터 > 통일교실 > 초등학교 교실

통일교실

[통일교실]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름은 백두리, 한우리 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 만들어 가도록 해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에 볼까요?
오른쪽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교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일자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시작
1일차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천년 새역사	1. 남북 분단의 과정 2. 분단 이후의 남북한	
2일차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1)	1. 북한사람들의 의, 식, 주거환경	
3일차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2)	1. 북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 2. 북한의 교통수단 3.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4일차	통일을 열어 나가는 길	1. 통일의 의미	
5일차	신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	1. 통일을 준비하는 어린이의 자세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홈페이지 화면

나. 정책고객서비스(PCRM) 실시 | 정책고객서비스(PCRM)는 민간의 고객관리기법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도입, 일반국민·전문가를 대상으로 관심분야에 따라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의견을

2005년 주요 정책고객서비스 실시현황

자 료 명	시 기
독도문제 관련 한일관계 기조와 대응방향에 대한 NSC 상임위원회 성명문	3월
개성공단사업추진현황	4월
북한조류독감 피해지원 등 남북협력기금 사용	4월
통일부 금년에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4월
남북차관급회담 설명자료	5월
통일4행시 공모 안내	5월
6·15 통일대축전 참고자료	5월
우리측은 북측에 6·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합의사항 준수 촉구	6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의 의미와 성과	6월
정동영 대통령특사 방북 성과 및 의의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과 해설자료	6월
통일문제 관련 여론조사	7월
“통일문화 페스티벌” 초대 자료	7월
중대제안(대북 직접 송전 계획) 관련 참고자료	7월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합의서 및 결과 해설자료	7월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회의 결과 해설자료	8월
9개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8월
8·15 행사시 북측대표단의 현충원 참배관련 보도문 및 참고자료	8월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9월
제4차 6자회담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사	9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10월
통일교육원에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10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10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	12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12월
송구영신 「도전총일벨」 퀴즈 이벤트 안내	12월

수렴·반영하는 쌍방향 직접홍보 서비스를 말한다. 2004년 2월 도입한 PCRM시스템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39,356명이 통일부 고객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남북회담 및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해설 자료와 각종 정책자료 등을 뉴스레터, 정책속보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널리 활용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정책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고 해외동포 및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학계, 언론계, 정계 주요 인사들에게도 신속하게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5년 6월부터 주간 단위로 펴내고 있는 영문 뉴스레터와 영문 정책 속보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선도적인 예로서, 국제화되고 있는 통일 문제와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 전자공청회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개최되는 전자공청회는 특정 주제에 대해 네티즌들이 활발한 토론과 진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2005년 말까지 총 16차례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 네티즌을 우수토론자로 선정 시상하고 있다. 2005년에는 「통일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2회의 공청회가 열렸고, 총 1,296명이 4,592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네티즌의 활발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청소년용 주제를 별도로 선정·추진한 결과 10대 청소년 최고 참여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 및 통일관련 주제에 대한 ‘네티즌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2005년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구 분	개 최 기 간	주 제	의견제시 건수	내용조회 건 수
제1차	6.17~6.30	새롭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북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1,143	9,863
제2차	10.18 ~10.31	통일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 통일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	3,449	23,933

2. 홍보매체의 다각화

가. 홍보자료 발간·보급 | 2005년도에는 6·15 5주년과 부산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평화번영정책」 및 대북정책 추진성과를 국내외에 올바르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하였다. 홍보자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고려하고 세대별·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제작함으로써 남북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총 6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였는데 남북관계의 중요한 사진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화보집 『제2의 6·15시대를 열며』는 국민들이 대북정책 추진현황을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예인 손예진씨를 기용하여 개성 현지에서 촬영하여 제작 당시부터 화제가 된 개성공단 홍보 영상물은 서울시내 극장 공익광고 방송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의 산실인 개성공단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5년 주요 홍보자료 발간 현황

자 료 명	발간부수(수량)	형 태
「평화와 번영의 실천」 영상물	1	영상자료
「평화와 번영의 실천」 리플렛	3,000	책자
「제2의 6·15시대를 열며」 화보집	3,000	책자
「APEC 계기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영문)	3,000	리플렛
「통일홍보영상물-개성공단 편」 홍보물	1	영상자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홍보책자	3,000	홍보책자

나. 감성으로 다가 선 청소년 대상 홍보 | 통일부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실생활 속에서 통일문제에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홍보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 2004년 마린블루스, 둘리, 마시마로 등 인기캐릭터가 등장한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웹 카툰을 제작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데 이어 2005년에는 유명 온라인게임인 카트라이더의 캐릭터 및 이미지를 활용하여 ‘둘이 아닌 하나로’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통일홍보 애니메이션 2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와 함께 카트라이더 게임을 이용하여 2005년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I LOVE UNIKOREA’를 캐치프레이즈로 온·오프라인 통일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이벤트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에 노출되어 있는 ‘I LOVE UNIKOREA’, ‘통일사랑 나라사랑’ 등의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2005년 12월 4일에는 오프라인 이벤트로 ‘통일부와 함께하는 카트라이더 최강전’을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게임을 즐기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강의도 받았다. 이는 통일문제에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어렵게 여겨온 통일문제에 대해 감성적 접근을 시도한 새로운 정책홍보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카트라이더게임 행사 배너



3. 언론매체 활용 홍보

대북정책 추진현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대북정책 추진 관련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기자단에게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보도자료는 통일부 등록기자단에게 배포함은 물론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한 해 동안 157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또한 장·차관이 42회, 실·국장 및 홍보관리관이 216회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및 방송출연 등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주요 언론사 논·해설위원, 비정부단체(NGO), 통일부 등록 기자들과 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내용과 관련동향을 상세히 설명

하였다.

통일부는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북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인 「국정브리핑」내에 「통일부 뉴스」(unikorea.news.go.kr)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9월에 개설된 이래 ‘정책속보’, ‘보도자료’, ‘포토뉴스’, ‘통일칼럼’, ‘기획연재’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북정책 추진성과를 알려왔다. 2005년에도 통일부뉴스를 통해 남북회담 개최 현황, 개성공단 개발현황,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현황, 대북 비료·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3절 통일교육의 내실화

1. 통일교육 추진체계 확립

정부는 통일교육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 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2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정부의 통일교육 활성화 임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통일미래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을 확고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가.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 정부는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화·활성화 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법률안은 2004년 5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5년 1월 27일 공포(법률 제 7355 호)되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급 교육기관은 이를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시 국회의장 추천 수를 6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통일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방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통일교육 시설의 부족 문제 등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통일교육 기본방향 정립

(1)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및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2월 「2006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은 남북관계의 확대 발전에 따른 통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고, 평화 공존 시대를 향한 통일교육 확대,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공간적 확산, 통일교육 기관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 「통일교육지침서」 개편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2000년부터 전문가와 학교·사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설정, 교육지침으로 정립해 오고 있다. 「2006년도 통일교육지침서」도 2005년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최근 북한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북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는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환경의 변화를 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는 청소년들이 통일과 북한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하였다.

(3)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운영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구성되었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인사, 민간전문가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05년 8월 제4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3기에 비해 통일교육관련 민간단체 대표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 「2006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2006년도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4) 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

정부는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기관의 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 또는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각 지역교육청과 함께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 및 도덕·사회과 교사를 초청하여 주제발표 및 집중토론을 하는 방식의 워크숍을 총 7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2. 통일교육의 다양화

가. 초청교육 | 정부는 통일교육의 내실화, 정보화 시대에 맞춘 사이버 통일교육 확대, 교육과정 운영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2005년에는 총 26,420명을 초청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분야별로는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1,187명을 비롯하여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1,679명, 원격(온라인)통일교육 956

명,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 20,401명, 공직자 1,087명, 사회 각계 인사 1,110명 등이며, 이는 계획(18,610명)보다 41.9% 초과하여 실시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초청교육뿐 아니라 개성공단 남측근로자에 대한 현지 출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교육내용은 기본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분하여 ‘국제질서 변화와 통일 환경’, ‘남북한 통일방안과 평화번영정책’, ‘최근 북한 실상과 변화 전망’ 등을 기본과목으로 편성하고,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실태’,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공동체 건설 방안’, ‘민간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 대상별로 특화된 전문과목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나. 순회교육 | 순회교육은 국내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 순회교육은 각 지역 여론주도층, 사회통일교육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 5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 현황을 설명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2005년도 하반기 통일교육원장을 중심으로 한 순회교육을 15회 실시(9개 시·도, 약 2,570명 참여)했다.

해외 순회교육은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의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문제의 국제적 지지기반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남미지역(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 5월)과 미주지역(미국, 7월)에서 재외동포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다. 사이버 통일교육 | 정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

go.kr)를 구축하였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3,200여명으로 2005년 말에는 방문자수 450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5년도는 원격교육용 서버의 성능향상, 원격교육관리시스템(LMS) 개선, 온라인 강좌콘텐츠 신규개발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후속조치로서 2006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원격통일교육 직무연수’ (60시간, 4학점) 장기과정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06년 5월부터 장기과정 원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해인 2004년은 수도권 지역 초·중등 교사를 중심으로 원격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5년에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권역별로 초·중등 교사 1,181명에게 원격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2006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총 13회에 걸쳐 원격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통일무관심을 해소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방식인 통일게임, 통일만화, 북한 청소년 백과, 한마음학교 등의 청소년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 2004년 9월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권장 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 등 네티즌들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해 금강산체협소감문과 기념사진 공모, 통일 4행시, 통일퀴즈, 도전 통일벨 등 다양한 사이버 통일교육 이벤트를 개최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단문 메시지 등을 통일교육 고객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메일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통일칼럼, 통일교육 사례 등 통일교육에 유익한 콘텐츠로 꾸며진 웹매거진(Unizine) 시스템을 개발하여 매월 통일교육위원과 교사 등 15,000명을 대상으로 발송, 통일교육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있다.

라. 통일문화페스티벌 개최 | 정부는 2005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 까지 광복60주년 기념 통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신바람나는 통일’, ‘마음으로 느끼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통일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나 휴가철을 맞은 직장인들이 가족 단위로 참여하였으며 총 관람객이 8,400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학생들은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문제에 대해 접함으로써 통일에 대해 흥미롭게 느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북구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주로 주말 공연행사 등에 참여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처럼 통일문화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는 통일교육의 긍정적 이미지를, 지역주민에게는 친숙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통일문화의 형성과 통일교육원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통일문화페스티벌
개막공연

3.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가. 학교통일교육 지원 | 정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이 될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정보·자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2001년에 구성된 「통일교육장학협의회」를 2004년도에는 전국의 시·군·구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로 확대, 총 400명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의 다양한 교육방법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연2회 「통일교육소식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였다.

아울러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초등학교 4, 중학교 12, 고등학교 7, 총 23개교)에 대해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고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해 통일부가 주최하고, 시·도교육청 및 각 지역 통일관이 주관하는 「전국 학생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초·중·고 각각 운문 및 산문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총 288명의 부문별 입선자에게는 통일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통일교육원장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학사회의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연구 진흥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4년에 설립된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88개교)를 중심으로 각 대학 산하 통일문제연구소간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문적 교류를 지원해 왔다. 대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및 대북관 정립과 대학내의 통일의식 확산을 위해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5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46편이 응모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선작을 선

정하였다.

나.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 정부는 2004년 12월 3일부터 2005년 2월 27일 기간 중 중·고교생과 교사 19,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체험학습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는 중등학교 통일교과 담당교사와 중·고교생 등 17,000여명에 대해 금강산 체험연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 담당자들이 남북관계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현장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등 15,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통일교육원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가 추진한 「도전 통일벨」 퀴즈 이벤트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과 통일교육시범학교 고등학생 2,000여명도 체험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온라인과 체험학습이 연계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사회통일교육 지원

(1)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정부는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사회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동 협의회에는 2005년 연말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88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도에도 국고보조금 4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회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도에는 주요 사업으로서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통일교육 사례발표, 워크숍 개최 등 본부사업, 통일교육 연구소 사업,

여성·청소년·지역주민·시민 등 대상별 통일교육사업, 통일강좌, 통일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통일관련 교육프로그램, 시설 및 정보 등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5개 지역(춘천, 천안, 광주, 부산, 대구)을 중심으로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주체로 지정, 5개 센터별로 각 4천만원을 지원하였다. 5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총 41개 사업(176회)을 추진하였다.

(3)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정부는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5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713명의 위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713명 중 525명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명칭도 ‘통일교육위원’으로 개칭하고 관리규정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들 위원의 교육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자료 제공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북지원 인도요원, 금강산 체험연수 등 총 332명에게 북한방문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베트남 등 구사회주의권 현장연수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위원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통일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 연계체제도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4) 통일관 운영 지원

통일관은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관은 현재 부산, 광주, 인천, 청주, 대전, 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자유총연맹,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전국 통일관에 있는 분야별 북한 안내시스템(터치스크린)에 대한 프로그램 교체 및 전시패널 7종 78개, 개성공단 생산물품 등 전시물품 5종 121개, 홍보안내 리플릿 20만부를 제작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위성 TV 수신기를 5개 통일관(부산, 인천, 광주, 경남, 제주)에 설치하였다. 2005년에는 총 330여만명의 국민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라. 대상별로 특성화된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정부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에 보급하고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통일교육관련 기본교재로서 『북한이해』와 『통일문제이해』, 통일교육총서는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등 3종, '통일문제강좌'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등 7종을 기획하여 발간하였다.

한편, 2005년에는 『한반도 어떻게 변하고 있나』 등 통일교육용 영상교재 총 3종을 제작하였다. 영상교재는 일반국민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등과정 도덕 사회과 수업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이 밖에도 방북 예정자 교육용 교재로 활용 중인 『북한방문길라잡이』를 방북목적 및 대상별로 차별화하기 위해 우

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관광길라잡이』를 선보인바 있다.

2005년도 통일교육교재 발간 현황

성 격	교 재 명	부 수	형 태	배포대상
기본교재	통일문제이해	18,000	책	학교, 교육생,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정부 기관 등
	북한이해	18,000	책	
통일교육 총서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1,000	책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1,000	책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1,000	책	
통일문제 강좌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6,000	책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6,000	책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3,000	책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3,000	책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1,000	책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1,000	책	
	남북한 IT 용어 비교	1,000	책	
영상교재	한반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3,000	비디오 · CD	소방방재청 등
	만화영화 「새」	3,000	비디오 · CD	각급 학교, 교육청
	평화와 번영의 길	90	비디오 · CD	현대아산 등

제4절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강화

1. 주요국과의 정책협의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국가와 세 차례의 고위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에 걸쳐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하여 고위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가한 정동영 장관은 폐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전략을 밝히고 북한의 부산APEC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하워드(John Howard) 호주 수상, 리치(James Leach) 미국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과 만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북한 인권 문제 및 탈북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정동영 장관은 다보스포럼 참석에 앞서 독일을 방문하여 쉴리(Otto Schily) 내무장관, 슈톨페(Manfred Schtolpe) 교통건설주택장관과 한·독 고위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코쉬크(Hartmut Koschyk) 연방의원,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전 동독 총리 등 과도 만나 한·독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현지 정부관계자,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 대북정책 홍보 심포지움의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한편 한·미 고위정책협의회의차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정동영 장관은 체니(Dick Cheney) 부통령,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 줄릭(Robert B. Zoellick) 국무부 부장

관, 해들리(Stephen J. Hedley) 안보보좌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면담내용 등 방미 직전에 이루어진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루가(Richard G. Lugar) 상원 외교위원장, 리치(James Leach)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미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워싱턴 방문에 앞서 뉴욕에서는 키신저(Henry A. Kissinger) 전 국무장관, 슈와브(George D. Schwab) 미 외교협회 회장 등 인사들과 면담하고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였다.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하반기 한·미 고위정책협의회의에서 정동영 장관은 라이스 국무장관, 줄릭 국무부 부장관, 해들리 안보보좌관,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 머코우스키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해이글(Chuck Hagel) 상원의원, 리치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등을 만나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 북한 인권문제, 한미동맹 등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솔라즈(Stephen Solarz) 전 의원 등 유력인사들과 만나 6자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정동영 장관은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평화를 이루고, 남북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화해와 평화가 필요하다는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제시하였다.

2. 통일주재관 운용

정부는 독일통일 직후인 1990년 12월 5일 독일주재 통일연구관을 파견한 후, 1996년 8월부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독일 4개국에 통일주재관을 파견하고 있

다. 통일주재관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외교 업무와 통일외교 업무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총력외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주재국에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 통일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와 세미나 참가를 통해 대북정책 홍보에 주력하였다. 행정부, 의회, 언론,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내 여론주도층 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홍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주재국 정부 입장 파악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재국 대북정책 관련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하였다.

주재국 내 한반도문제에 관심 있는 다양한 정책고객에 대한 대북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주재관이 주관하는 「한반도문제전문가회의」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반도문제전문가회의」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현지에서 대북정책 관련 여론을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네트워크로서 구성·운영되며, 분기 1회씩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주요 문제에 대한 정보교류, 정세평가 및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썬크탱크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전문가 네트워크는 주재국 정부관계자 및 외교안보 분야 학자 및 연구원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주재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북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고객의 수요 파악 및 홍보 전략 수립과 관련한 자문단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통일주재관들은 현지에서의 민간급 대북접촉 및 방북을 지원하고 교포 및 현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방북절차·이산가족 상봉절차·대북투자절차 등을 수시로 상담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현지 상담창구 역할도 수행하였다.

3. 국제 네트워크 강화

주요 방한인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황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는 노력도 전개하였다. 2005년에 통일부를 방문한 외국의 주요 고위 정부인사로는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국 국무장관, 다우너(Alexander Downer) 호주 외무장관 등이 있다. 정당, 의회와 주요 국제기구·연구기관 인사로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 에반스(Gareth Evans) 세계위기감시기구(ICG) 대표, EU 의회 대표단, 프랑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단, 리치(James Leach) 미국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풀너(Edwin J. Feulner) 헤리티지재단 회장, 키신저(Henry A.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 페리(William Perry) 전 미국 국방장관, 슈와브(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사무총장, 펨펠(T. J. Pempel)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부르킹스 연구소 방문단 등이 있다.

또한 5월 남북차관급 회담 및 6·17 김정일위원장 면담, 제4차 6자회담 등 남북관계 관련 주요 회담이나 면담 개최 직후에는 미·일·중·러 등 주변 4국 및 EU 공관장을 대상으로 회담결과를 설명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계기별로는 주요 주한 외교사절을 면담하여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도모했다.

4. 해외 정책홍보 확대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 한반도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 평화 문제이기도 하다. 북핵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 확보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2005년 ‘통일캐리반’이라는 이름 하에 주변4국 및 EU주요국의 정·관·학·언론계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여론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미국지역(4월 5일~10일, 뉴욕·워싱턴·로스앤젤레스 및 11월 26일~12월 4일, 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 일본지역(12월 19일~22일, 도쿄·니가타·나고야), 중국지역(4월 25일~29일, 장춘·북경·상해), 러시아지역(8월 27일~30일, 블라디보스톡·하산·우수리스크) 통일캐리반 실시를 통해 대북정책 순회설명회, 국제학술회의, 고위·실무 정책협의,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홍보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지역과 국내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적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였다.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평화협력원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협력 로드맵을 설명하였다.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중국 베이징(北京)대·푸단(復旦)대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내지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중국 베이징(北京)대학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정신과 내용 및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한·중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북한·중국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해 발표하였다.

통일부는 닛케이포럼(5월 25일~26일, 일본 동경), 한·중전략대화(7월 11일~13일, 중국 베이징), 한·러전략대화(10월 19일~24일, 러시아 모스크바),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 세미나(11월 10일, 미국 워싱턴), 북한문제와 남북관계 설명회(11월 21일~25일, 미국 워싱턴·뉴욕)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에 참가하여 정부

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한반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통일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주요 실무관계자들이 파이낸셜 타임즈지, 일본 산케이신문 등 다양한 해외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다양한 영문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였다. 5월에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CD 및 소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출품하였다. 또한 2005년도 통일백서 영문판 *White Paper on Korean Unification 2005*를 3,000부(전자책 1,000부 별도 제작) 발간하여 세계 170여개국 정부와 한반도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연구소 및 주요대학 도서관, 해외 언론사, 해외주재 한국대사관,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하였다.

한편, 2005년 6월 18일 주간 단위 영문 뉴스레터 발송을 개시하여 12월 말까지 27회를 발송했으며, 영문 정책 속보를 11회 발송하였다. 영문 뉴스레터는 남북관계 현황을 경제, 사회문화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진전 사항과 행사 등을 소개했으며, 또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시범 단지 가동과 본 단지 1단계 기업 입주 등 추진 현황을 홍보하였다. 특히 장관급회담 결과 등을 정책 속보로 보내어 현안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뉴스레터를 수신하는 해외 주요 인사들은 발송 초기에는 그 수가 380명이었으나 계속 확대되어 12월말 6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의 학계, 언론계, 정계의 인사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영문 뉴스레터와 정책 속보를 통한 해외홍보는 정부 부처중 선도적인 것으로서, 국제화된 통

일문제와 남북교류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홍보 | 600만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남북간 화해와 협력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재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여론 형성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 활동을 전개하였다. 7월에는 「2005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50여개국 250명의 한인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정동영 장관이 ‘한반도 평화와 주변정세’라는 주제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봉조 차관은 10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재외동포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15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 토론회’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포사회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또한 중국·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신문·방송사 9개사에 「통일칼럼」을 정기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러시아연방 사할린 새고려신문사의 「무궁화 문학콩쿨」 등 동포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와 현지 대학 연구소의 한반도문제 관련 세미나를 지원하여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고양을 도모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개방 확대

1. 북한 정보자료 제공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를 보여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변화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변화전망을 예측하는 데 주력하였다.

2005년도에는 정치·외교·경제·사회·대남 등 전 분야에 걸쳐 880여건의 내부 보고서를 적시에 작성·공급하여 대북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하였다.

한편, 계기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각종 회의 등을 수시 개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북한에 대한 분석·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분야별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정리한 「주간 북한동향」을 북한문제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780여명의 정책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북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그동안의 책자 배포 방식을 보완하여 이메일 발송도 병행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간에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해 오고 있다.

국민들의 북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급적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북한주민의 생활 및 의식변화 등에 중점을 둔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 하였다.

북한에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의 각 분야별 「북한 변화동향」을 종합 발간하여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실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 단체들의 조직 및 인물들의

현황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과 주요 인물에 대한 세부 활동사항을 정리한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를 발간,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에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의 연간 일정별 주요행사 및 공휴일과 1948년 이후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등을 수록하여 도표화한 『2006년도 북한주요행사에정표』도 발간·배포하였다. 최근 북한경제 실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의 북한경제 관련 동향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한 「2005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도 발간·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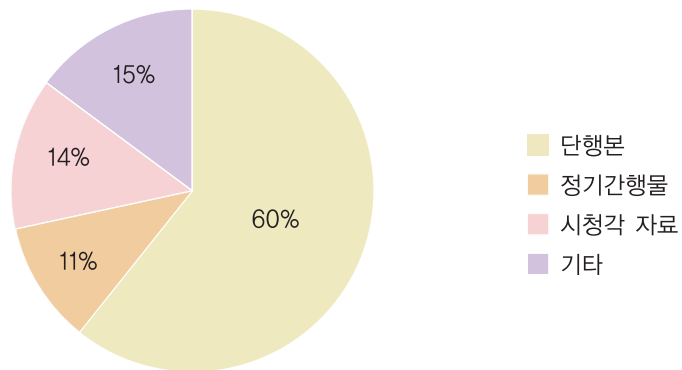
한편,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지원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북한연구 전문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자료 제공과 함께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였다. 북한문제의 국제화 추세를 반영하고 국제적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관련국 정부기관 및 전문가, 연구소 등에 북한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정보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 북한 정보자료 개방 확대 통일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 광화문 우체국 건물 6층에 소재한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고, 북한영화 상영 및 북한실상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2천여 권, 정기간행물 1만여 권, 화일자료 3천여 건, 시청각자료 6천4백여 건, 통일부 발간물 3천7백여 건 등 총 8만6천여 건을 보유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북한 원전 자료 보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북한 원전 자료 보유 현황

종 류	자료 건수
단행본	17,824
정기간행물	3,203
시청각 자료	3,990
기타	4,406
계	29,423



또한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단체 회원 및 새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1989년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실상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05년 한 해 34회를 개최하여 5,635명이 참가하였으며, 1989년 이후 2005년 12월말까지 총 369회의 북한실상 설명회가 개최되어 총 2만9천3백여 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북한의 예술영화, 아동영화 등 북한 영화 2,800여 편을 소장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적으로 상영해오던 북한영화를 2000년부터는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의 5개 지방도시의 통일관으로 확대하여 상영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북한영화는 총 489회 8만5천여 명이 관람하였고,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총 관람객은 4,045회 68여만 명에 이른다.

북한자료센터는 1998년부터 도서, 그림, 우표, 음반 등 북한 반입자료에 대한 심의를 총 260회 33,474건 하였으며, 1999년 12월에 통일부 소장 비이념성 북한자료 5천여 권을 일반자료로 공개하였다. 2003년에는 특수자료취급인가증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수자료취급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이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대외적으로 2004년 국회도서관, 외교통상부, 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정보자료 교류협약 체결에 이어, 2005년도에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정보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협약 체결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체결기관 간 북한자료 이용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자료센터 서고를 전면 개가제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서고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북한자료 공개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998년에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를 개설,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 13만 여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소장정보 및 원문을 제공, 이용자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북한영화 소개’ 코너를 신설, 북한영화의 줄거리와 동영상을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실’ 코너를 통해 북한교과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북한실상 체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10월 정부의 북한 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조치로 일반 국민들은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에서 북한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 프

로그래밍 편성표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TV의 시간대별 방송 내용을 알 수 있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결국 북한정보자료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북한자료센터에서 영상자료를 포함한 모든 북한 원전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통일부와 정보교류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해서는 북한자료의 대출과 복사까지도 대폭 허용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수자료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북한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6절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업무 혁신

1. 혁신비전과 전략

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비전 | 통일부의 미래상을 담은 혁신비전은 2004년초에 4차례의 전직원 워크숍을 거쳐 설정되었다. 통일부가 당면하고 있거나 직면하게 될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굴한 뒤 혁신비전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통일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로는 조직환경과 조직내부 역량으로 나누어 입체적으로 진단했다. 첫째 국제 환경적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가 점차 국제화되고, 남북관계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의 영역으로 확대·다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시야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둘째, 국내 환경적 측면으로는 전후 세대의 증가로 인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최근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북지원과 남북간 경제적 협력에 소극적인 여론들이 형성되어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통일부의 내부 역량측면에서 기존의 관행 위주의 업무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미래 설계를 위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품질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변화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환경과 조직역량의 현주소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부가 지향해 나가야 할 혁신의 미래상으로 '국민과 함께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부'로 설정하였다. 이는 통일의 미래상은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극복과 함께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밝은 미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더불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통일부가 배양해나가겠다는 각오를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혁신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2005년도의 구체적인 혁신목표로는 ‘열린 통일부’ ‘지식 통일부’ ‘일류 통일부’로 선정했다. ‘열린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북정책의 입안과 추진 및 결과를 우리 국민은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합의와 공감에 기초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식 통일부’는 최근의 국제관계가 이념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경제와 자원, 테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민족의 미래를 설계할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의 전문성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 가령,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비핵화 레짐(regime)에 관한 이해는 물론 핵물질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며, 남북간 경제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통행, 통관, 상사중재 등 경제분야의 전문지식도 구비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일류 통일부’는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주변국가와 공조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정책적 판단이 존중받는 일류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상황인식을 담고 있다.

나. 학습과 보상을 통한 참여형 혁신추진 전략 | 통일부의 비전과 혁신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추진 체계 개편과 교육과 학습을 혁신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기관장 중심의 혁신을 부서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혁신추진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이는 실국장들이 소속 직원들과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각실

국의 특성에 맞는 혁신을 독려함으로써 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실국별 혁신보고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서장이 혁신의 전면에 나서도록 하며, 또한 자체 혁신점검을 통해 실국별 혁신활동을 평가하고 우수실국은 보상을 함으로써 실국간 건전한 혁신경쟁을 유도하였다.

두 번째는 혁신교육과 학습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간위탁교육과 공무원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원들을 혁신의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 협력자로 바꾸어 나간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세 번째로는 혁신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을 적극 보상함으로써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 동기부여(positive incentive)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혁신활동을 평가하여 혁신 포인트를 부여하는 혁신마일리지제도를 운용하였다.

혁신목표와 전략 체계도

혁신비전	국민과 함께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부	
조직미션	남북간 신뢰증진과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혁신목표	열린 통일부, 지식 통일부, 일류 통일부 구현	
혁신전략	1. 기관장 중심에서 부서장 중심의 혁신추진체계 확산 2. 교육과 학습을 통한 변화관리 3. 혁신참여 유도를 위한 보상체계 시행	
중점과제	고유과제	선도과제
	1. 국민참여 통합기반 구축 2. 통일, 외교, 안보부처 네트워크 강화	1.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2. 경력개발제도 도입 3. 주요정책 발표 사전점검 시스템운영 4. 온라인 홍보강화
	기본과제	참여과제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2. 민원제도 개선 3.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4.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5. 문서처리과정 전자화	1. 업무 중심의 지식관리 활성화 2. 전문분야별 학습조직 운영 3. 단계별 민원제도 개선 시스템 정착

2. 통일업무 혁신성과

2005년에는 혁신과제와 혁신리더쉽, 혁신교육과 학습 분야에서 착실한 성과를 거양하여 정부혁신평가에서 다른 24개 부처와 함께 '변화노력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는 혁신 4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가. 혁신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참여 개선 | 고유과제(2개), 선도과제(4개) 및 기본과제(17개) 등 모두 23개의 혁신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각 과제별 특성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첫째, 고유과제로 「국민참여 통합기반 구축」 및 「통일, 외교, 안보 부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대북정책에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국



통일·외교·안보 부처
고위급 워크숍

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대북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5년 8월에는 통일고객마일리지 시스템을 개통시켜 연말까지 약 3만4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정책제안이나 참여활동을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마일리지 적립자에게는 금강산 관광, 대북인도요원 등의 활동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통일, 외교, 안보 부처간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총 7회에 걸친 합동워크숍에 7개 부처에서 연인원 650여명이 참석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교환과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실무자급 워크숍에서는 친선 체육경기를 통해 함께 땀을 흘리면서 부처의 벽을 넘는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어 통일, 외교, 안보 커뮤니티라는 동질감을 나눌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안문제에 대한 부처별 '터널비전'을 극복하고 균형잡힌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둘째, 선도과제로는 18개 정부 공통과제 중에서 인사 및 정책홍보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인사 분야에서는 「직무성과계

약제」와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과제로 선택하였다.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을 통해 향후 3~5년의 통일부 업무 추진방향에 입각한 조직의 미션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개인의 성과목표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성과계약을 통해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성과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준비를 통해 순환보직에 따르는 폭넓은 시야도 확보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배양할 수 있는 인사제도 도입 준비를 마쳤다.

한편 인권전문가, 대북에너지 전문가,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체제 및 법률 전문가 등 전문인력(8명)을 특별채용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확충하였고, 승진인사 다면평가에 실무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행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정책홍보분야에서는 ‘주요정책 발표 사전 점검시스템’과 ‘온라인 홍보 강화’를 선택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기금제도 개선 등 14건에 대해 사전홍보협의를 거쳐 발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였다.

온라인 홍보는 특히 통일주역세대가 될 청소년층의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의 성과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3차례의 전자공청회와 온라인 게임(카트라이더)에 통일 캐치프레이즈 광고판 설치, 사이버 통일 4행시 공모전 등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밖에 기본과제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문서처리과정 전자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했다. 새터민, 이산가족 등 정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제도 개선과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통일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연공서열이 아닌 일한만큼 대우받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적에 기반하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균형성과평가(BSC) 기본 설계를 마쳤다. 2005년 동안 전자문서의 유통율이 99.3%에 이르는 등 종이가 사라지는 사무실 환경도 구현하였다.

통일부는 또한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전문분야별 학습조직 운영 등 직원들의 업무관련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환경조성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 결과 연간 약 3,000건의 지식자료가 지식관리망(KMS)에 등록되었고, 등록된 지식은 약 36,000여회 열람되어 등록 지식건당 12회의 활용율을 보였다. 또한 대북지원전략 연구반 등 약 30여개의 온/오프라인 연구커뮤니티가 구성되어 관심분야별 전문지식이 축적시켜 나갔다.

나. 자율적 혁신추진 역량 강화 |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혁신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교육이 실시되어 혁신저변 확대와 일상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간부급, 실무급 등 다양한 교육에 직원들의 75%가 참석하여 일상적 혁신 추진의 공감대를 넓혔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동아리와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 등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 대북지원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문지식을 축적해나갔다.

각 실국별로도 자체 혁신추진팀을 구성하여 특성있는 혁신을 추진해나갔다. 다양한 가치와의 공존을 강조하는 ‘폴레랑스 포럼’이나, 북한경제연구모임 등을 통해 남북통합에 대비하고,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자체 혁신점검반을 구성하여 각 실국의 혁신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혁신점검반의 점검결과는 혁신보고대회시 보고하고, 우수 실국 소속 직원들에게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했다. 직

원들의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 활동자에게는 포상금과 특별휴가를 실시하였다.

혁신추진에 대한 조직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혁신자문위원회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혁신의 방식 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학습조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시각을 장차관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혁신기사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있었다.

다. 대화 잘하고 학습 잘 하는 조직문화 건설 | 분단의 벽을 넘어 민족의 통합을 주도하는 통일부의 직원들이 업무를 핑계로 과와 실국간 벽이 존재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내부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부서간, 직급간 ‘벽’을 허물고 소통의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한곳에 모여 담소를 하는 모임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 모임은 ‘수다회’로 불리며 꾸준히 개최되어 오면서 각종 시상식과 중요사항까지 발표하는 장소로 발전하게 되어 ‘대화 잘하는’ 통일부의 조직문화를 선도하였다. 또한 탄력근무제, 직원 친절운동, 부서장의 직원면담제도, 실국별 혁신워크숍 등을 통해 부서내 직급간, 부서간 의사소통이 장애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통일부 직원들이 늘어난 여가를 독서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통일부 권장도서 1,000권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후 부내 독서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권장도서 독후감 경진대회도 개최하였다. 독후감 경진대회에는 직원은 물론 직원자녀들도 참가하여 독서를 매개로 온가족이 통일문제에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교류협력국 직원들이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이용방안,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등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자료를



브라운 백 런치 세미나에 초청된 고은 시인이 직원들과 토론하는 장면

모아 『업무지식화 발표자료』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밖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을 하는 브라운 백 세미나를 매월 1회씩 개최하였다.

한편, 통일부의 혁신과 대북정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2005년 5월에 개최된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박람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홍보하고자 리플릿 『평화와 번영의 실천』(국·영문판)을 제작·출품하였고, 통일부 부스를 마련하여 방문객들에게 직접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통일 행정 서비스 | 2005년 한해 동안 민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먼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05.5.31)하여 남북교류에 따르는 법과 제도 및 절차를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고쳤다. 구체

적으로 남북간 통행절차를 간소화하여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통행시간을 20분 단축하였다. 또한 남북간 물품의 반출입과 통관 및 검역절차를 개선하여 남북경협 기업의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시켰다.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제도와 손실보조제도를 개선하여 대북투자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평가의 평가지표로 정책고객분야를 신설하는 등 민원 및 국민참여 관련 실적을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하였다.